

경상북도 의회소식

2021. 가을 제128호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QR코드를 통해
경상북도의회 소식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장래 대한민국과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오늘의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야 한다.

주경철의 《어떻게 이상 국가를 만들까?》 중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집단지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뜻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지는 집단지성.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은 도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에 경북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부잠수교

경상북도 의회소식

2021. 가을 제128호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경상북도 의회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over Story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처럼 결실을 함께 나누길...”
아침저녁 부는 선선한 바람이 낯을 스칩니다.
가을바람이 선사하는 '기분 좋음'이 우리의 마음을
여유 있게 만듭니다. 만물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
짧기에 더 소중한 계절임을 아는 우리입니다.

동행 통하길

- 06 인사말
- 08 위원회 활동
- 19 5분 자유발언
- 22 의원 인터뷰 Part I
 - 방유봉 의원
 - 이종열 의원
 - 장경식 의원
 - 이동업 의원
 - 이수경 의원



매력 누리길

52 의원 인터뷰 Part III

박권현 의원
박창석 의원
조현일 의원
박미경 의원

60 의정 소식

64 법률 돋보기

대체공휴일 자세히 알기

66 경북 명소

가을이 빛어낸 절경
문경 선유구곡

68 독자 참여

퍼즐로 알아보는 경북 명소

공감 손잡길

32 도정 질문

36 의원 인터뷰 Part II

김수문 의원
남영숙 의원
박한국 의원
정근수 의원
박정현 의원

46 처리 의안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발행인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최대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장 발행일 2021년 10월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
전화 054-880-5144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 접속 후 상단메뉴 중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클릭 '소식지 신청하기' 작성
구독 취소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054-880-5144)로 연락

『경상북도 의회소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취재·촬영하였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시면서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방역과 백신 예방 접종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상의 회복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더욱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는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도민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원 및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 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 우 현**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들녘마다 오곡백과가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들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예방과 방역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많은 도민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이 되고자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고 도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 희 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리의 은행잎들이 속삭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도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든 도민 여러분께 언제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재도약을 위한 힘찬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륙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공항을 보유한 글로벌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2028년 통합신공항에서의 첫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경상북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고민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의정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지식과 의회구성원의 지원역량을 함께 높이는 데에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도 기 욱**

더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 의원들의 생생한 활약상 위원회 활동을 만나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도민을 위해 의정을 펼쳐나가는
의원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위원회 활동을 통해 만나본다.



자치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경상북도의회!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희영)는 8월 20일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라 변화된 도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도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내방객에 대한 홍보물 제작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7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의정 역량강화 및 홍보 기능 확대를 위해 의정지원담당관실 등이 신설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가 증액 계상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도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설치 등에 관한 자치조직권 강화 규정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 등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 후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임기만으로 시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도의회가 의정활동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획경제위원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사 및
민생관련 안건 처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4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우리 기획경제위 소관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마음을 알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검증하고자 많이 노력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6건 심사, 위기에 처한 도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8월 25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 여성행복국 40억 원, 자치행정국 33억 원, 복지건강국 6천 40억 원으로 총 6천 113억 원 규모를 심사했습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경 교육위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안한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편성된 국민지원금이 신속 집행되어 현장에서

도민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코로나 위기가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문화환경위원회 ·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민생경제살리기 위한 특단 대책 촉구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문화관광체육국 69억 원, 환경산림자원국 100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16억 원 등 국·도비가 증액 편성됐으며, 정부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분 반영, 민생경제 안정 및 각종 재해 대응 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안건 심사에서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관광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며, “추경 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원안 의결하고 대형트롤러선 동해 진출 저지해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동해 수산자원과 영세어민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급감하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제와 파종, 시비 등의 영농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심사에서는 농축산유통국 225억 1,619만 원, 해양수산국 51억 4,064만 원, 농업기술원 1,872만 원 예산 증액 원안을 통과시키고, 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러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 수역에서 조업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맞서 동해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대형트롤러선의 동해 진출을 막기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거쳐 국회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에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민, 울릉군, 경북도의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해에 대형트롤러선 조업을 계속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설소방위원회 ·

제2회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와 도민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3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해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침체에 빠진 경북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건설위 위원들은 용역 보고회 직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대응 태풍 대비상황 점검과 비상근무자 격려를 위해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8월 30일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과 도로가 유실된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교육과 교육력 회복·강화에 집중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5,378억 원이 증액된 5조 1,724억 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환경구축, 교육력 회복강화,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비 885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의 기본적 학습권 피해 발생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 확대와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학생 1인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예산이며, 지역과 학교 현장을 발로 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교육회복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2021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 소관 추경 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출 부문에서 15건, 119억 5,64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목소리를 심도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예결특위 활동에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기 살리기, 학습결손에 따른 교육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긴급한 예산은 타 현안들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현장의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제안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제3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시대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자치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예산 편성권 등을 모두 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의견 수렴은 물론,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위한 의정활동 펼쳐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7월 29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적기업인 (주)스마트인디지털(경산시 소재)을 방문해 현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코로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은 2019년 코로나 발발 후 현재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1만여 건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을 격려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확인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에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코로나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회적기업인 (주)스마트인디지털을 방문하였습니다.

윤승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는 정치·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면서,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라는 터널도 끝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에서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에 맞는 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더 좋은 경상북도를 위한 의원들의 생생한 활약상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 2.)

임미애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의성 / 더불어민주당)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동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탄소중립 대책 관련

최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고, 2035년에 내연기관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에 납품하는 협력사에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압박의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도내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감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연계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수적이지만, 목표 이행을 담보할 기제와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인력과 예산도 없으며, 통계 및 정책 지원 연구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 특징이 달라 획일화하기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큰 숙제입니다. 2030년 경상북도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해 경북의 각 분야, 각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3개 시군이 각 지역 내 온실가스를 측량해서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 시민, 학생들에 대한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탄소중립 공론화 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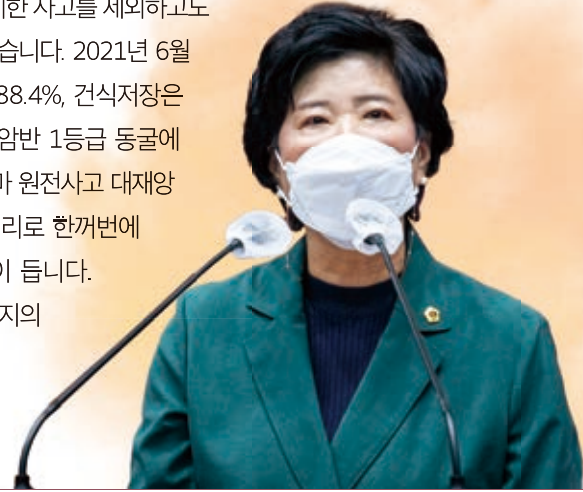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 2.)

박차양 의원 (농수산위원회 / 경주 / 무소속)**경주 외동읍·양남 간 터널 개설 관련**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서 외동읍 입실사거리까지 연결하는 19km의 이 도로는 지방도 제904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외남로라고 불립니다. 내륙과 동해안을 잇는 이 험준한 고갯길은 도로 폭이 좁고 갯길도 없으며 굴곡 구간이 20개소, 급커브 구간이 12개소나 됩니다. 이러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904호선의 교통사고 발생 100건 중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도 47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주 동해안에는 원전이 있고 중 저준위 방폐장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을 보면, 습식저장은 172,119다발 중 88.4%, 건식저장은 100% 전량을 월성 원전 내 지상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 500미터 암반 1등급 동굴에 처분장을 만들어 영구 보관해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재앙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지만 대비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자가용 등이 거리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지금과 같은 도로 상태로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전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로 확보, 경주와 동해안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 증진 등을 위해 양남면 석촌리에서 백일산을 관통하여 외동읍을 잇는 터널 개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동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 2.)

박미경 의원 (교육위원회 / 비례 / 민생당)**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영유아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책 마련 촉구**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다방면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 일본은 2023년부터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해저터널을 뚫어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고 바다에 방류된다면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북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이 농·수산물과 같은 식재료의 오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징이나 냄새가 없기 때문에 전문 측정기기를 사용해야 오염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인 미취학아동에게는 미량의 노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매해 1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방사성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내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전수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 관할의 어린이집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유아가 성인보다 방사능에 20배 이상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내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23개 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수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유해물질검사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동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 2.)

김시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칠곡 / 더불어민주당)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동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칠곡 오펑분교 폐교 관련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철우 지사님의 정책과 엮박자를 낼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펑분교의 경우 추진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진 않은가 합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자체인 칠곡군과 지역구 도의원에게 어떠한 협의나 보고 없이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오펑분교 운동장에 폐교 후 활용 예정인 수학체험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는 폐교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학부모 동의를 받긴 했으나 과정이 정당했는지, 동의 의사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 대표 및 오펑초 출신들과 마을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대부분이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반대여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셋째, 오펑분교 폐교는 지역발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행위입니다. 오펑분교는 뛰어난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기존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펑분교 폐교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 2.)

이철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포항 / 국민의힘)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동영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 일대 태풍피해의 조속한 복구 촉구

태풍 '오마이ς'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8월 30일 오후 5시 현재, 경상북도 12개 시·군에 953건, 109억 원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항은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 70억 원의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8월 29일까지 공공시설 응급 복구율은 97.7%입니다. 그러나 12호 태풍 '오마이ς'의 집중호우에 의한 포항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8월 30일까지 파악된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167건이고, 사유시설로 주택 전파와 반파가 각 1동과 9동, 주택 침수가 186동의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13.8ha와 농작물 56.3ha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집중된 포항시 북구 죽장면뿐만 아니라 8월 29일까지 장기면, 구룡포읍, 흥해읍, 동해면 등 포항 전역에서 수해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죽장면 피해는 포항지역 전체 피해 신고의 80%가 넘는다고도 하고, 피해액은 8월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7억 원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더불어 피해를 입은 시·군의 응급복구비를 하루 빨리 정부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등 복구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포항과 죽장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기준을 넘어서는 만큼 정부의 합동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즉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도록 도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관광으로 울진에 활력을!

방유봉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울진 / 국민의힘

첫 만남에서 울진에 대한 자랑으로 운을 댄 방유봉 의원이다. 그는 지역민이 보내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울진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아오고 싶어 만드는 매력적인 힐링 관광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국제적인 관광 프로젝트를 꿈꾸다

울진 후포면 등기산에 위치한 스카이워크는 울진에 가면 잊지 말고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길이 135m(목재테크 68m, 스틸 그레이팅 10m, 접합 강화유리 57m), 폭 2m, 해상높이 20m로 조성됐는데, 강화유리 바닥을 밟으면 하늘을 걷는 아찔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발아래 흐르는 코발트 빛 바다와 바위에 파도가 부딪혀 만들어낸 하얀 물살도 장관입니다. 색다른 즐거움을 관광객에게 선사하죠.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약도 있습니다만, 울진은 현재 새로운 관광명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울진에는 매력적인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동해를 품고 있다’, ‘대게가 유명하다’ 정도만으로는 설명하기 너무 아깝지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울진을 탈바꿈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제가 늘 품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 바로 울진이니깐요.

쭈뼌한 스토리텔링으로 해저관광 도입

울진에는 후포면에서 동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 바위 ‘왕돌초’가 있습니다. 전체 약 15km²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최소 2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해안 해양생물의 서식 경계를 해석할 수 있는 생물 지리학적 연구에서 왕돌초가 매우 중요한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양보고 왕돌초를 통한 해저관광을 개발해야 합니다. 국내 어느 곳에서도 왕돌초만큼 훌륭한 해저관광 자원이 존재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 8월 개장한 ‘죽변해안스카이라일’도 있습니다. 죽변항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왕복 4.8km 구간을 잇는 바다 위 11m 높이에 설치된 궤도형 전동차인데, 죽변 앞바다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돌미역 떼배 채취’ 현장인 봉수포구, 드라마세트장인 하트 해변, 그리고 용추곶이 선사하는 바다절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 고려한 크루즈 관광 육성

앞서 언급한 관광자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울진은 무려 82km나 되는 긴 해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연안 크루즈 관광 육성이 그 중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울진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평해읍 거일, 직산지구 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대단위 숙박시설을 유치해 조성한다면 울진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울진공항의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경비행장으로 이용하면 ‘직산 ~ 월송 ~ 구산 ~ 기성 ~ 사동’을 잇는 해안도로도 개설될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모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울진과 경북도, 중앙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울진은 국제적인 해양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해저관광, 해산물채취, 수중레저 등 체험관광을 더해 매력적인 해양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울진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교육기회를! 지역민에게 교통편의를!

이종열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영양 / 국민의힘

‘최초’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상당하다. 선제적이고 혁신적이면서도 모범적이고 성공적이어야만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 이종열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그렇다. 경북에서 최초 시행되는 공립대 등록금 무료화에 대한 이야기, 경북도민과 영양지역 주민들을 위해 펼쳐나가는 도정활동 이야기를 그를 통해 들어봤다.

비슷했던 등록금 총액 VS 평균 장학금액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장학금과 등록금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결과 경북도립대학교는 연간 교내 장학금 16종(4억 원), 국가장학금 3종(9억 2,000만 원), 교외장학금(5,000만 원) 등이 존재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장학금을 산출해 보니 1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재학생 부담 등록금 총액 18억 6,0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이 둘의 차이가 불과 4억 7,000만 원밖에 나지 않는 셈입니다.

2021년 재학생 수 818명의 장학금과 등록금 납부액의 차이가 5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조례를 개정해 도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전국 최초로 공립대 등록금 무료

기존의 각종 장학금 제도에 장학금 추가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 대도시 쏠림현상은 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북에는 이미 19개 시 · 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개정은 도립대를 운영하는 경북도가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고등교육 내실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해야만 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양 접근성 위해 4차선 확 · 포장 촉구

영양군민을 위한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 6축 고속도로(영천 ~ 양구) 조기건설과 '무창 ~ 기산' 지방도 917호선 2차선 확 · 포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영양군은 도로 인프라가 열악한 탓에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실제로 영양지역은 경제성 부족과 많지 않은 교통수요를 근거로



들며 모든 도로 건설 사업에서 배제된 탓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4차로, 철로, '3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경북도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방도 917호선은 경상북도가 지방도로 승격 이후 26년간 방치되어 영양군이 교통여건이 최악의 지역으로 손꼽히며 지역발전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영양군민들은 지역소멸을 막을 생명선으로 여길 만큼 4차선 확 · 포장은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영양군민과 경북도민, 더 나아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917호선 확 · 포장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기에 저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해왔습니다. 3월 5일 도정질문 후 다음 날 영양을 직접 방문한 도지사가 현장을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결국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00m(세진주유소 ~ 영양중교 초입) 4차선 확 · 포장 건설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경북의 균형발전과 영양군민을 위해 경북 북동부권의 소외된 민심을 다독이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장경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포항 / 국민의힘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떨어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본격 시작됐다는 우려를 낳았다. 소멸고위험 지역이 많은 경북은 이 같은 사안에 특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장경식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말한다.



눈앞의 현실, 인구 절벽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산율 0.84명(가임여성 1명당)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북의 인구 감소추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경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7로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포항, 칠곡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포항과 경주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정체상태이거나 감소상태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209조 원을 넘게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내년에는 출산율이 0.7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정부정책에만 해결을 기댈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 주도의 종합전략이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정책들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의 노력

경북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미지원 시설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북형 마을돌봄터,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 산부인과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형 지방소멸 대응 모범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LH 청년임대주택 건설, 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춰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과 '경북형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을 문경에 시범 조성해 도시민들의 귀농귀향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인구 회복에 사활 건 포항

포항시도 인구 회복을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포항인구는 50만 2,900여 명(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매년 3,000여 명씩 줄어 들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 50만 명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교부금은 47%에서 27%로 급감하고, 2개의 구청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실로 다가온 위기 앞에서 포항시는 '범시민 주소 갖기 운동 동참', '공직자 주소 바로하기' 등 포스코와 지역대학·군부대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전입 시 지역화폐 '포항사랑카드(1인당 30만원)'를 지급 중 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호공원 해상케이블카 및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청년포스트하우스' 등 청년층 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상황에 맞는 미래 준비

창의적이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자체 및 우리의 몫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출산·육아 등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민간기업의 지역이전과 유치, 청년창업지원, 돌봄 공동체 조성 작업 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경북 도내에서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 결국 경북은 사라질 것입니다. 경북이 당면한 위기와 현실을 직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다 꼼꼼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민의 생활에 ‘행복’ 더하기

이동업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포항 / 국민의힘

이동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경북에 대한 그의 애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했을 수많은 고민들도 함께 느껴진다. 언제나 열의 가득한 의정활동을 하는 그를 만나 최근 발의했던 조례안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발판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출석 일수가 줄고 원격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시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바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분리된 아동들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라 일컫는 쉼터 같은 복지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을 뜻하는데, 이를 돕고자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가정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사업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경북도에도 필요시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 수도권과 비교해 보면 경북은 다소 늦게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도정 신뢰성 확보와 사회통합

지난 6월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경북도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도정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유발시킵니다. 발의한 조례안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도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 우려 시 사전에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갈등의 예방과 조정·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회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관리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사업과 시·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경북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해결하여 도정 신뢰성 확보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구 포항, 인구 유입 방안 고심

외부에서 볼 때 포항은 인구감소에 대한 걱정을 경북 내 타 지역보다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송면의 경우 2만여 명이던 인구가 현재 3천7백명까지 급감했습니다. 포항시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즐길 거리,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신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며, 주거문화는 물론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합니다. 저 역시 지역민의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시책을 모색해 포항의 실질적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 개선이 해법이다!

이수경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 성주 / 국민의힘

이수경 의원은 경북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왔다. 그는 경북 지역 내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북 농업의 발전과 농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늘 앞장서는 그를 만났다.

환경오염 유발하는 미수거 영농폐기물

농촌을 다니다 보면 방치된 폐비닐이나 농약 용기 등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은 약 32만 톤 수준에 달하는데, 그중 6만 톤 가량은 수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발생한 약 7,200만 개의 폐농약용기류 중 약 1,400만 개가 수거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지금보다 더 원활해지면 경북의 농촌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을 정하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인 만큼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정의와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개인 또는 단체'라고 수거자를 정의한 것을 '개인, 단체, 운반업자'로 변경하고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운반업자'라고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수거보상비 지급과 관련한 부분도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6조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수거에 대한 보상 지원이 확대된 만큼 이로 인해 그동안 저조했던 경북 지역 내 영농폐기물 수거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한걸음 더

영농폐기물에 관한 이 같은 개정은 전국 통틀어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경북도가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된 이후 농촌 현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농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농민들은 폐기물 수거가 예전에 비해 잘 처리되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운반업자들 또한, 확대된 지원에 반색을 표하며 수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매우 낮았던 영농폐기물 수거율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 단위 최초 시행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경북도가 영농폐기물 수거율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을 통해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경북의 농촌 환경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앞장서 경북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대변**해 **질문**하다

도정 질문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지사나 관계 부처 등에 도민을 대신해 불공정한 사안을 시정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도민의 관심 현안과 경북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 볼 수 있는 격론의 장을 들여다보자.

※ 도정 질문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각 의원별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선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비례, 국민의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 생활SOC 기반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사학혁신,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실질적 방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용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이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행정통합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북의 생활SOC시설을 강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내 청도군과 봉화군만이 문예회관이 없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 지원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축제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생력을 가진 지역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제도 등 도 차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학혁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법정부담률을 공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드론조종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가 전문교육기관 승인을 못 받아 교육과정의 훼손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음은 큰 문제입니다. 경북드론고만 유독 인가를 못 받은 것은 경북교육청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1차 본회의 21. 8. 20.(금)



나기보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천, 국민의힘)



“농촌 일손 부족 대책,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산업육성, 경상북도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인구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먼저 현재 5개월로 제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면 인력난이 해소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경북도가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관련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확보되어도 격리수용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북도와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16개국 26개 도시 중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운용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는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경북 영농인력 확보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근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인력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한 경북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은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지 밝혀주시고, ‘혁신도시 시즌 2’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와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관련된,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학교 운동부 체육활동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학생 운동부 체육 활동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운동부 운영 방식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안동, 국민의힘)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도내 비지정문화재보존 및 관리 방안,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원도심과 도청신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편의와 통합신공항과 연계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국지도 79호선 노선 확장 및 선형개량을 보다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북관광을 살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 트렌드 대응을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낙후된 안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차전놀이와 연계한 축제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경북도 차원에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모델 구축,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라 자부하는 경북의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은, 정부의 문화재 보존 정책과 부합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모두 포괄하는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의 구축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또 비지정문화재는 보존·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를 발하지도 못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경북의 향후 대책도 제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미배치 학교에 대한 배치 계획과 인원 증원 등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도내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개선 방안도 함께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농수산위원회
의성 | 국민의힘

도민을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

경북 내에서 '핫한 감자'로 떠오른 이슈를 손꼽으라 한다면 대부분 주저 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을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도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다. 김수문 의원은 진정한 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 반드시 도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위의 대구편입, 지방소멸 가속

김수문 의원은 최근 군위군의 대구편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성명을 냈다. 그는 “대구편입은 도민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며 “군위의 대구편입 문제는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군위군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대두된 무계획과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한 채 지금까지처럼 추진하면 수많은 정책 수정과 다양한 문제 제기가 따를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행정구역 편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암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경북도의 세수 위축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편입은 빨대효과를 일으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칠곡군, 경산시 등의 편입까지 이어진다면 주위 시·군 유입까지 이뤄져 경북도 자체의 존립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신중해야 할 백년대계 국책사업

김수문 의원은 “어째서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만 올인하는 경북도지사와 통합신공항 문제를 임기 내에 해치우려는 대구시장, 군민들의 합의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군위군수, 이들 삼자 간 이해관계만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삶이 직결된 행정구역 변경은 결코 단체장들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여



론도 거세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경북도와 도의회, 군위군,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에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 의견’ 공문을 발송하고 군위군 편입 반대 성명서도 발표하는 등 대구에서도 군위 편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와 군위는 광역공공교통망이 부재하고 칠곡군과 팔공산이 가로막고 있어 도로 접근성도 열악하다”며 “그동안은 행정구역이 달라 상호교류가 적었지만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이에 관한 수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구역 편입으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해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이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도민 납득이 최우선

군위의 대구편입에 대해 김수문 의원은 그 절차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 현안 해결에 지자체들끼리의 거래관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아무런 실익이 없었던 ‘대구·경북행정통합’처럼 이번에도 도지사가 결정하고 도민들은 ‘무조건 따라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부른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차후 도민들에게 어떠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상상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군위의 대구편입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광역권 통합이 이뤄진다면 함께 해결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를 군위의 대구편입이라는 단면적인 해법으로만 밀어붙이며 별도의 주민투표 없이 도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지금의 방식은 옳바르지 않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세세히 설명하고 전 도민의 의견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영숙 의원

농수산위원회
상주 | 국민의힘

경북의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너무 자주, 또 많이 들어서 '귀가 닳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은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남영숙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늘 지역 구 상주의 미래, 더 나아가 경북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주, 낙동강 품고 관광에 날개를!

남영숙 의원을 만난 곳은 낙동강 상주보 상류에 위치한 경천섬. 하중도(河中島)로 섬을 둘러싼 강물과 그 뒤에 펼쳐진 비봉산 절벽이 장관을 자아내는 생태공원이다. 그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천섬과 경천대는 풍광이 아름다운 국민관광지”라며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고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외부 관광객이 늘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실제로 이곳은 근처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수상레저센터가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승마장, 상주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오토캠핑장 등이 운영되고 있어 체험관광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는 “상주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즐길 거리를 관광자원으로 품고 있는 곳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포스트코로나 이후 상주의 미래먹거리로 관광자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농복합도시 경북을 위한 조례

남영숙 의원의 지역구 상주는 경북도내에서 3번째로 면적이 넓고 산지보다 평야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금까지 농업 관련 조례안을 많이 발의해 왔다. 그는 “농수산위원회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다”며 “농업현장에서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 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수산위원회의 소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도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그가 발의한 조례안 모두 경북의 농업활성화와 농민들의 삶의 질 개



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경북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희 상주시의 경우 꽃감, 오이, 포도가 유명한데, 이처럼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특화작물들이 육성되어야 농업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경북 전역에 있는 농업과 어업 유산을 보전하면 그 경제적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도가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도의 의무도 강조했다. 그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전담부서 및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발의했다”고 말하며 먹거리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도 “경북도내에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기본권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그의 각오가 조례안을 통해 발현된 셈이다.

경북 미래 위한 교육의 중요성

농업 외에 남영숙 의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올바른 제도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아동, 청소년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이런 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이 그것이다. 그는 “심각한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에 경북의 그 어떤 지역도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고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북의 미래, 경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도정활동의 걸음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는 남영숙 의원이다.

박현국 의원

농수산위원회
봉화 | 국민의힘

경북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이면서 농업인 출신인 박현국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농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이다. 그 어떤 분야보다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바로 농업.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로부터 농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늘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

최근 농작물 자연재해는 연례행사처럼 찾아오고 있다. 올해 4월에도 경북 내 일부 지역은 꽃샘추위로 인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박현국 의원이 지난 6월 있었던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진 이유다. 그는 “농민들을 크게 애먹였던 냉해피해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며 “무려 경북에만 3,171ha의 피해가 집계됐을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런 자연 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었다”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랜 세월 농민들의 곁에 있어왔던 그였지만 근래 몇 년만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많았다고 느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란 말이 이제는 무색할 정도”라며 “예측 가능한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제는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고 고백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딱 20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문제점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보험 가입률과 비용부담

우선 기대에 못 미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이다. 박현국 의원은 “2019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농작물 재해보험 평균 가입률은 45.2%에 불과한데, 그중 경북은 39%로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경북 내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불신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과수 등 주요 품목 몇몇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또 농민에게 불



리한 보험 약관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불신이 농민들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험 운용사인 NH손해보험이 과수의 피해 보장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피해보상 수준도 낮췄다”며 “수령 이력이 있는 농가는 보상금마저 삭감되는 현 상황에서 농민의 불신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과수 보장 범위는 기존 80%에서 50%로 하향됐으며, 사과, 배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한 열매숙기 전 피해 보상도 50%로 줄었다. 또 보험금 수령 이력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이 삭감됨에 따라 보상률과 자기 과실률을 적용하면 전체 피해의 30 ~ 50%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낮은 지방비 부담 비율도 문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국비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중 지방비 35%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가장 낮아, 열악한 재정상태의 시·군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농사짓기 좋은 경북 위해

박현국 의원은 농민에게 불합리했던 제도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농사짓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실제 경북도는 지난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 시 전염 과수 주변까지 모두 매몰하는 것은 불합리한 대응이라 여겨 농식품부 장관에 피해 과수만 매몰하도록 건의해 실제 반영되기도 했다. 그는 “농수산위원회가 경북도와 협의해 농가의 보험 부담률을 20%에서 현행 15%로 낮춘 것처럼 과수 보상 상향, 개인 단위 보험료율 적용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방안들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확인한 만큼 ‘농사짓기 좋은 경북’이란 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수 의원

농수산위원회
구미 | 국민의힘

도민을 위한 행보
책임감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
맺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뜻이다. 정근수 의원이 그렇다.
지역구와 도민을 위해 시작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 아름다운
결실을 내는 것, 무엇보다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다.

도심 속 휴식처, 들성생태공원

구미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달을 기점으로 큰 발전을 이룬 곳이다. 그래서인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금오산을 비롯해 숨은 명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정근수 의원을 만난 들성생태공원도 그중 하나이다. 그는 “구미 사람들은 이곳을 문성지라고도 부르는데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진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을 등지고 조성된 들성생태공원은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봄에는 겹벚꽃, 여름에는 연꽃과 수련, 가을에는 억새 등이 잘 식재되어 있어 도심이 주는 화색 이미지를 식물의 푸름으로 열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수달이 이곳에 살고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들성생태공원은 2006년 조성 당시 그가 구미시 의원으로서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터라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 그는 “2010년 완공 후 주변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들었다”며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뜻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우광장과 함께 근처에 식당, 카페들이 준비하여 나들이를 나오면 산책과 식사, 휴식이 모두 가능하다”며 “조만간 수영장도 건립이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구미 시민들의 사랑을 더욱 듬뿍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 발전을 향한 농수산위 활동

정근수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북의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도정활동에도 열심이다. 최근 그가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화 조례안’이 그렇다. 그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은 물론 환경보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분뇨 등을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해 다시 사용하는 ‘자원순환조직체’는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는 시장·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그는 “지속가능한 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축산업, 더 나아가 경북도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북이 미래 환경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은 구미를 위한 길

구미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는 늘,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고심한다. 정근수 의원은 “지역민들에게는 뒷골이라는 말로 익숙한 선산읍의 선산체육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며 “제도에 따르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정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 두 곳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정원을 통해 구미의 관광 인프라를 확장시켜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구미의 발전을 위해 꼭 마무리해야만 하는 숙원사업이 몇몇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원 조성과 더불어 무을면민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68호선 도로개량공사, 들성생태공원의 수영장 건립, 안곡저수지의 생태공원 사업 등을 끝까지 잘 마무리지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박정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고령 | 국민의힘



고령군의 미래,
함께
그려 나갑니다

박정현 의원은 항상 자신을 '대가야 고령 출신'이라고 소개한다. 그만큼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도정활동 시 매번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소신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그는 지역구 고령, 더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한다.

대가야의 후에 고령군

고령군민이라면 누구나 대가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에 긍지를 지닌다. 가야문화권은 뛰어난 철기문화와 지산동 고분군, 악성 우륵 선생, 전통 현악기 가야금 등 우수한 유·무형 유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이 앞장서 이를 발굴·육성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박정현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는 “고령군을 세계적인 역사·음악도시로 육성하여 대가야의 세계화와 경북 내륙권역의 균형발전,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동시에 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륵 박물관 리모델링, 동서양 악기연구소 등을 바탕으로 한 도립 대가야현악박물관 건립과 대가야 대중 및 종각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약 없이 표류 중인 가야사 특별법 제정도 언급했다. 가야문화 발굴·복원의 기틀 마련을 위해 발의했던 가야사 특별법 2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 그는 “21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라며 “가야사 연구 및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해결 지역 현안 타파

박정현 의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문제 대해서도 관심이 깊다. 특히 이 가운데 8년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



는 강정고령보의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119구급차 외에 일반차량 통행은 달성군의 반대로 지금까지 금지되고 있다”며 “우륵교를 통해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 넘게 우회하다보니 주민 불편은 물론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물류비 등 낭비가 막심하다”고 했다. 그가 특단의 대책을 도에 요구하는 이유다. 보 인근 친수공간 문제도 마찬가지. 그는 “달성군과 비교해 고령군은 축구장과 농구장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다. 다양한 레저시설과 유람선 선착장 등 군민의 여가활동, 체력증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의 예산 지원 및 관계기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1975년 지어져 노후화로 재건축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고령군민체육관도 마침내 국·도비(49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확보해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경북도와 정부에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도 군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바람을 위해

박정현 의원은 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로 도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도의원이란 ‘도의회와 도민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다. 그가 발의했던 ‘경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도 이러한 신념의 결과물이다. 그는 “재선 도의원으로서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도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의원발의 조례

1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의원



개정이유

경상북도 현행 조례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명시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2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병준 의원



개정이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발맞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출산 및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로 확대 규정함.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배한철 의원



제정이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원 대상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하며, 교육감은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

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

대표발의
박용선 의원



제정이유

경상북도 학생의 진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진학지원금은 진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함.

5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의원



제정이유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북 교육 구성원 등 이용자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함.
-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6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조현일 의원



제정이유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유급,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교육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7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배한철 의원



제정이유

4차 산업 시대의 진입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학기술, 직업 환경에 맞게 신기술에 대한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북형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4차 산업 미래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8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차양 의원



개정이유

최근 도내에 빈집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을 위해 빈집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임대주택,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9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진욱 의원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29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음.

10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준열 의원



제정이유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민간자원의 자발적인 초동조치를 독려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활용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화재,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음.

11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태춘 의원



제정이유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제 및 파종, 시비 등 영농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용 드론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을 적극 육성하여야 함.
- 도지사는 시·군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함.

12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병직 의원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경상북도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13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병준 의원

개정이유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우선하여 받게 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발맞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음.
-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가구소득분위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14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
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하수 의원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를 둠.

15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선희 의원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완화
-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16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방유봉 의원



제정이유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위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 외 활동,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축제 · 문화 · 관광 홍보, 기업 ·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함.
-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 ·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 외 인사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17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영서 의원



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함.
-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처리 의안 원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QR코드를 스캔 또는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council.gb.go.kr) 접속 후 상단메뉴 중
의정활동 - 의안정보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문화예술인을!

더 나은 청도를 위해 늘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안을 살피는 박권현 의원. 청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그가 펼쳐온 의정활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박권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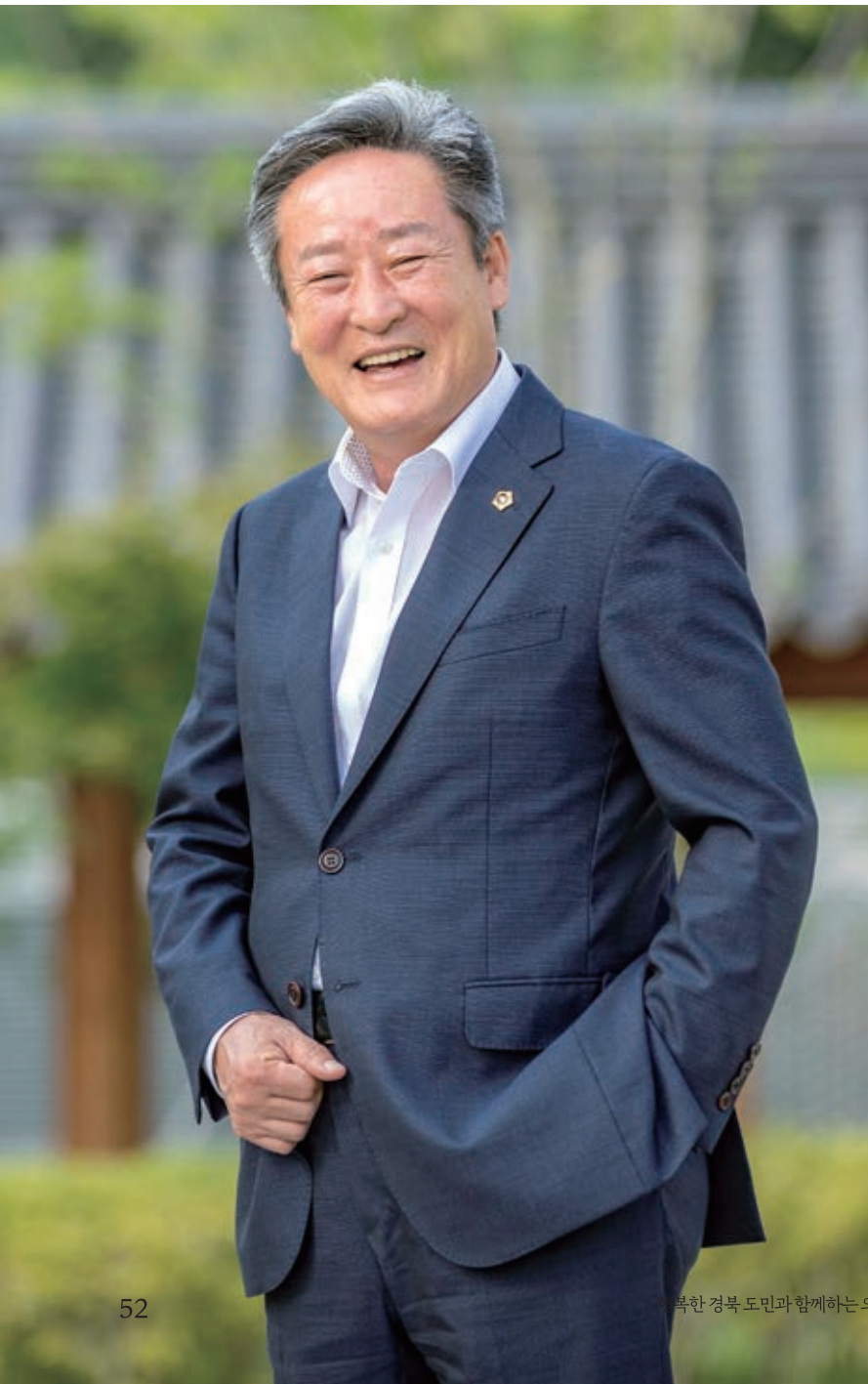
건설소방위원회
청도 | 국민의힘

Q ____ 최근 도정 질문에서 새마을운동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____ 청도 지역민들에게 지난해는 새마을운동이 50주년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의미 있는 기념사업들이 취소·축소되는 바람에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됐지요.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앞장서서 자율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자원봉사단이 앞장서서 마스크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Q ____ 새마을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A ____ 경북도에서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연평균 200명 정도의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뜻이 일선 읍·면·동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 자조 마을, 자립마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시·군 단위 평가와 일선 읍·면·동 단위 평가로 함께 시행해 우수 시·군 및 읍·면·동을 도지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하여 새마을운동이 기초 행정단위인 읍·면·동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____ 청도의 자랑, 소싸움 경기장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요구하신 걸로 압니다.

A ____ 현재 청도군은 민자 및 군비 1,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9,726석 규모의 원형돔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소싸움의 명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개장 이래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경기장이 폐쇄되고 소싸움 관련 산업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대면사업 육성에 발맞춰 청도 소싸움 경기의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입니다. 경마사업을 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 온라인 발매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만약 청도 소싸움 경기에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가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관련 종사자 및 청도군민들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____ 경북 남부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으신 것으로 압니다. 최근 성주, 고령, 청도 등 남부지역에 도립미술관 남부지구 건립을 제의하셨습니다.

A ____ 경북도가 균형발전을 늘 강조합니다만 경북 북부나 중부에 비해 남부지역은 발전이 더딤니다. 예로부터 청도는 화가, 작가 등 문화예술인이 많이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청도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청도에서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없어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립미술관 남부지구 건립은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협동·단합할 수 있는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이를 마련해 줘야 지속적으로 지역의 대형 작가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청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약속,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해 7월 30일은 경북에게 남다르다. 오랜 산통을 겪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공동합의문과 함께 '군위'로 이전한다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날이기 때문이다. 이후 가속이 붙을 것 같았던 이 국책사업에 최근 적색불이 들어왔다. 박창석 의원은 도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창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군위 | 국민의힘

Q ____ 최근 도정 질문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____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무려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대구·경북에 꼭 필요한 뉴딜사업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소음발생을 예상한 주민들의 반대에 오직 군위 한 곳만이 소음과 주민갈등을 무릅쓰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군위군민들은 군내 유치 갈등으로 2년, 도내 이전지 갈등으로 2년, 무려 4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위군의 대승적 차원의 결정으로 우보가 아닌 소보·비안으로 합의에 이르러 통합신공항이 무산되지 않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라는, 약속된 합의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Q ____ 지난 9월 2일 본회의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한 찬반 의견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고픈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A ____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도 찬성안, 반대안 모두 부결되어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북도의회 안이한 대처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시 대승적 공동합의문은 도의원 53명의 동의 서명을 통해서 합의된 만큼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합의에 대한 약속이행 투표이지 새로운 의견을 묻는 투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명 투표'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것도 책임회피용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여깁니다.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오랜 시간 각고의 과정 끝에 도출된 '대승적 차원의 약속'을 경북도의회가 스스로 뒤집은 셈입니다. 경북도의회가 통합신공항 추진과 군위군 대구 편입에 관한 대승적 공동합의문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게 굳건한 저의 생각입니다.



자세를 보일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Q ____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1인 시위도 하신 걸로 압니다. 주장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A ____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부결된 뒤, 저는 "서명한 약속도 저버린 도의회는 각성하라! 통합신공항 잘못되면 도의회 책임이다! 책임을 회피한 무기명 비밀투표, 기명투표로 응답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고우현 의장을 향의 방문하는 등 지역구 대표로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실현하는 기명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의회가 의미 있는

Q ____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절차들이 선행되고, 해결되어야 할까요?

A ____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무려 30여 개가 넘는 행정 절차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밝은 미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도의회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 백년대계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과 한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다면 도의회는 도의적 비난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학부모, 학생 모두 행복한 일상을 꿈꾸다

조현일 의원은 제10대, 제11대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한 교육 전문가이다. 폭넓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리더십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제도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그를 경산의 남매지에서 만났다.

조현일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경산 | 국민의힘

Q ____ 경산에는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명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____ 경산은 저수지, 못, 호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산시청 앞에는 가엸은 오누이의 사연을 담은 남매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 드라마와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반곡지가 있지요. 또 원효, 일연, 설총, 삼성현의 고장으로 성현들의 훌륭한 정신과 의의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일상 휴식처가 되어주고, 외지인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해주는 경산의 명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Q ____ 아이들의 놀 권리를 강조하며 대표발의했던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A ____ 조례안을 발의했던 당시보다 현재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보편화됐을 정도로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니 가정 분위기도 안 좋고, 어려운 가사 여건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는 더 보장되어야 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



들의 놀이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조례안은 놀이에 대한 바른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비 지원 보장과 함께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도내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Q ____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____ 코로나19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을 구현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초·중·고를 만들겠다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학교 건물과 교실에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와이파이 및 교육용 태블릿을 보급하는 것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성공적인 모델을 경북도 그리고 경산에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 공간의 혁신설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스마트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형 학교는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과 감성, 효과적인 학습, 휴식과 놀이 등에 필요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곳입니다.

Q ____ 경산은 대학교가 많아서 ‘교육의 도시’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경산이 어떤 교육 환경생태를 갖춰야 할까요?

A ____ 흔히 경산을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경산 소재에 대학교가 많다는 의미일 뿐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는 적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지 그와 관련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교와 초·중·고의 다양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아이들의 심신이 아프지 않도록, 학부모는 웃으면서 등교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단순히 교육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싶은 도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도민과 함께 경북 보건복지 · 교육의 혜안을 제시하다

박미경 의원은 2018년 6월, 제11대 초선 도의원으로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여성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여성이 행복한 경북, 아이들이 안전한 경북,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받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박미경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 | 민생당

Q ____ 의정활동이 벌써 3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활동을 돌이켜보면 어떤 점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A ____ 유아교육과 여성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
니다. 제11대 전반기에는 행정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발의
한 조례가 8건인데, 제11대 의원 발의
조례가 1인당 6건 정도인 점을 생각하
면 3년 동안 도민을 위해 열심히 뚫은 것
같습니다. 특히 8건의 조례에는 아동학
대 예방, 청소년, 보건 분야가 다수 포함
되어 있어 도의회 입성 당시의 초심을
잃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____ 대표발의했던 조례안 중 도민들이 변화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 몇 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A ____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
례안'은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
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무료접종 대
상을 확대 ·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
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 대상포진은
어르신들이 대상인데 무료접종에 포함
되지 않아, 고가의 비용 부담 탓인지 접
종률이 저조했습니다. 조례안 가결 후,
예산을 확보해 출생아 16,441명,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077명
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 내 청소년이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겪는 스트레스 장애를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 맞춤형 상담서비스·치료 제공,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지원, 예방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등한 건강·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했던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습니다. 국회조차 해내지 못한 것을 경북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의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과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상황에서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아당뇨 학생의 경우, 저혈당 쇼크 방지와 건강 유지를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만큼 학교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난치병 학생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165명의 소아당뇨 학생을 포함한 난치병 질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____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A ____ 지방의회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가 집행부와 별도의 독립기관



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예·결산심의를 통해 감시·견제의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의 입장을 대신해 더욱더 전문성을 발휘하고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____ 남은 임기 동안 경북도의회원으로 어떤 역할과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____ 우리 경북에는 아직도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끝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의 소리를 듣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경북은 현재 TK 소외, 패싱 등 내부적 어려움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안팎으로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들을 지혜로운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치권과 협치해 경북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대한민국의 중추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EWS

의정 소식



제325회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 제32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질문을 비롯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원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중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202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경상북도 8,217억 원, 교육청 5,37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증액됐으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8%)과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국민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대 하반기 예결특위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명의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제11대 하반기 제2기 예결특위 위원장에 최병준 의원, 부위원장에 정근수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1년도 추경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하반기 제1기에 이어 연임하게 된 만큼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장단 영덕시장 화재 현장 방문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9월 6일 영덕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상황을 둘러보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9월 4일 새벽 영덕읍 남석길 23-48 일원 영덕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시장은 점포 48동이 전소되고 30동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의장단은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청취하였으며, 복구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원인력들을 격려했다. 고우현 의장은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최대한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연구회가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울릉도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 자원을 위해 시행된 연구용역 결과, 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관광자원의 지속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됐다. 남진복 연구회 대표는 “2025년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환경오염과 자연 훼손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양수산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스마트 해양수산 정책연구회가 ‘경상북도 스마트 해양수산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의 해양수산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용역에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 방향과 정규과정 및 평생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이철구 연구회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진에게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독도 도발 일본 방위백서 “억지로 가득 차”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발표된 일본의 『2021년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된 것을 강력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 이후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이재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올림픽 개막 전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방역에 실패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여론 전환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NEWS

의정 소식



‘환동해권 발전연구회’ 온라인 포럼 개최

환동해권 발전연구회가 ‘환동해권의 의의와 관광분야의 광역협력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제1차 환동해권 상생발전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뉴 노멀시대 환동해권의 의의’를 포럼 주제로, 환동해권의 개념 및 잠재력과 지속가능한 환동해권을 위한 협력의 지향점을 시사했고, 오익근 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 명예교수는 ‘동해안 및 인근 내륙권 관광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자체 간의 지역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로 권역관광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은 유튜브로 시청가능하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연구회’ 최종보고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연구회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 및 재정현황, 인력운영, 추진사업 등을 검토하는 등 효율성 제고와 경영혁신방안 마련에 앞장섰다. 이종열 연구회 대표는 “연구용역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제고, 경영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 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진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청년경제정책연구회’ 청년 유입 대책 모색

문화청년경제정책연구회가 ‘경북 청년 정주 및 유입 정책 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경북의 청년 유출 현황 분석과 함께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 정주와 유입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박태춘 연구회 대표는 “일자리, 교육, 보육환경 등의 문제로 매년 도내 청년들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연구진에게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나아가 타 지역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건설소방위원회가 '경상북도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경북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용역에서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대 박준욱 교수는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내 SOC 공급·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LNG터미널,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및 확대 등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위원장은 "침체에 빠진 경북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재정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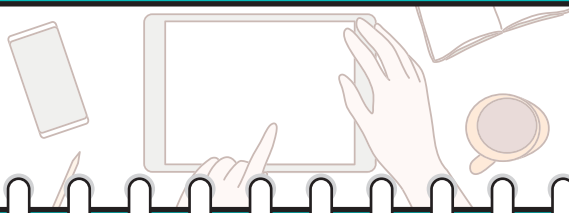
제5회 의정 아카데미 실시

경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한 2021 의정 아카데미에서 '탄소중립의 허와 실'이란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9월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특강에는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가 초빙되었으며,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선진국 환경정책사례, 최근 하천 복원 동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끊임없이 정진해 경북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 해양폐기물 대책 모색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가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 및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양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책임자인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 교수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에 방중심의 관리가 우선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 대표 이재도 의원은 "다음 세대가 깨끗한 바다를 영위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양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체공휴일 자세히 알기

2021년 올해 휴일 수는 지난해보다 3일이나 적은 113일이었다고 한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지정됐다. 광복절 이후부터 달라졌던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존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는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시행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수당



확대 실시된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이다. 단, 최소 15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20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 이 같은 사안이 해당되어 2021년 확대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상시 5인 ~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될 예정이다.

공휴일 = 공무원의 휴일



법적으로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한다. 명절, 선거, 일요일은 사실상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전까지도 민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협의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들이 출근을 해야 했다. 민간기업의 15일 이상의 유급휴일 적용이 불과 지난해인 202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체공휴일이 남긴 논쟁들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달력업계에는 일대 혼란이 가중됐다. 달력 제작 기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뒤늦게 발표하면서 지난 7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달력을 재제작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논쟁을 남겼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안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유급휴일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 보호망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지정·운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민들로부터 '휴일조차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에서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을이 빚어낸 절경 문경 선유구곡

주변 풍광이 아름답게 변하는 가을. 특히 산과 계곡은 알록달록 천연색으로 탈바꿈하고 저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다. 여름과 달리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기 좋은 계절인 가을.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경북에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탓에 신선이 노닐었던 계곡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경의 선유구곡이 그 주인공이다.



한 폭의 가을 풍경화

계곡을 따라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과 같아, 한여름이라면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유유히 걷고 싶을 정도다. 계곡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 걷는 내내 지루한지 모를 정도다. 살랑이는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물위를 따라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진다. 책 읽기 좋은 가을, 언젠가 읽어보고자 마음에 품었던 책 한 권을 들고 이곳을 찾아보자. 붉게 물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천천히 곱씹으며 책을 읽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했던 마음을 선유구곡을 통해 치유하고, 잊고 지나쳐버린 삶의 여유로움을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아 다시 한번 느껴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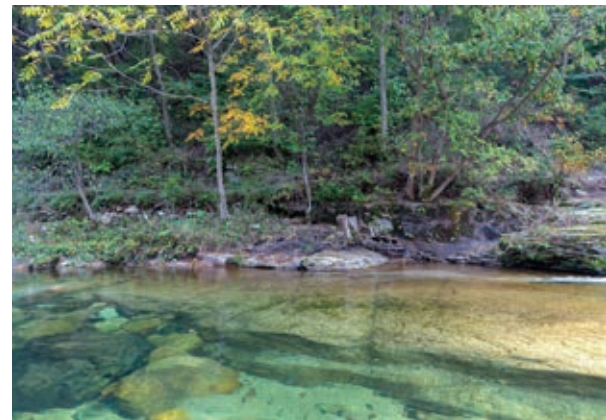
위치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원

주변 관광지 이강년 생가지, 봉암사, 소양서원, 문경 가은역

아홉구비가 만든 풍광

원래도 유명한 계곡이지만, 한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아이유가 다른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선유구곡을 찾은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더 유명해졌다. 선유구곡은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앞으로 흐르는 시내를 따라서 약 1.8km에 걸쳐 펼쳐진 구곡원림이다. 계곡물이 굽이치는 아름다운 아홉 장소에 옛 선비들이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인 탓에 구곡이라고 불린다.

선유구곡마다 바위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곳을 찾는 이들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문경 선유구곡은 옥하대(玉霞臺), 영사석(靈槎石), 활청담(活淸潭), 세심대(洗心臺), 관란담(觀欄潭), 탁청대(濯淸臺), 영귀암(詠歸岩), 난생뢰(鸞笙瀨), 옥석대(玉鴉臺)로 이어진다. 선유구곡 나들길은 운강 이강년 기념관에서 시작해 제1곡 옥하대에서 제9곡 옥석대로 가는 길과 학천정이 있는 제9곡에서 제1곡인 옥하대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이번 여행은 학천정이 있는 제9곡에서 제1곡으로 갔다. 선유구곡은 각 곡마다 외재 정태진의 한시와 안내판이 있어 여행객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퍼즐로 알아보는 경북 명소

여기는 어디일까요?
퍼즐을 맞추며 경상북도의 명소를 알아보아요.



문경 선유구곡

경상북도 문경시에 자리한 계곡.

문경의 선유구곡은 전국의 선유구곡이라 이름 붙여진 명승지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계곡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백 명이 거뜬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기괴한 암반과 거암들은 주변의 나무, 계류와 어울려 신선이 노니는 풍경을 절로 상상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퍼즐 응모

사진을 완성할 수 있는 퍼즐 조각의 번호를 골라 우측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퍼즐참여 QR코드

문의

경북도의회 사무처 의정지원담당관실(054-880-5144)

여름호 독자 참여 당첨자

윤원*(2546), 황미*(2154), 정병*(3733), 김윤*(1190), 손희*(9383)
안현*(7080), 이유*(1233), 김혜*(1456), 배상*(5335), 우민*(5698)



「경상북도 의회소식」
구독 신청 QR코드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1. 11. 9. ~ 22.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보기간

2021. 10. 1. ~ 31.(1개월)

제보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팝업창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yukuai1201@korea.kr), 팩스(054-880-5169), 우편(36759,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으로 제보
- 문의사항 : ☎054-880-5172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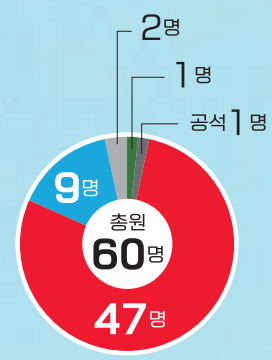


비례대표 6명

국민의힘 PEOPLE POWER PARTY
 박채아, 윤승오, 이선희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박태춘

민생당
 박미경



 국민의힘 PEOPLE POWER PARTY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무소속
---------------------------------------	-------------------	----------------	----------------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